

노동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‘육아기 10시 출근제’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9.(금) 매일노동뉴스, “기대했는데” 범위 좁고 의무도 아닌 ‘육아기 10시 출근’ 기사 관련

-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의 소규모 계열사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의무도 아니다.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인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.
- 노동부의 올해 예산 계획에 따르면 수혜 인원으로 추산한 규모는 1천700명에 불과하다.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, 자녀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‘육아기 10시 출근제*’를 올해 신설하였음

* 육아기 노동자의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자율적으로 허용한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제도(월 30만원)

- 육아휴직 등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률이 높은 대기업·공공기관 등과는 달리,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제도 활용률이 낮음
- 이에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대·중소기업의 일·생활 균형 격차를 해소할 필요

- 남녀고용평등법상 노동자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*는 정부의 급여 지원이 있으나 임금 감소에 대한 노동자 부담도 존재한다는 현장 의견도 존재

* 만 12세, 초등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는 최대 1년(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)간 주당 근로시간을 15~35시간으로 단축 가능

- 이에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1일 1시간 단축하여 자녀 돌봄 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본 취지임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‘육아기 10시 출근제’를 활용할 경우 단축근무 가능
- ‘육아기 10시 출근제’는 올해 시행 첫해로 신규 도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‘26년 예산 31억원(지원인원 1,734명)으로 반영하였으나,
- 향후 현장 수요 등을 모니터링하여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
- 정부는 향후 중소·중견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·산업단지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현 (044-202-7496)
		담당자	사무관	이치훈 (044-202-7473)

